

# 穀價 및 流通政策 再評價

金 成 勳

(全南大農大 教授)

## 糧穀政策의 再認識

우리나라에 있어서 穀價問題는 經濟成長政策의 對象이라기 보다는 經濟安定政策의 所管事項으로 取扱되고 있다는데 그 本質的인 問題點이 있다. 바꾸어 말하여 增產은 適正價格保障과 그다지 密接한 聯關이 없다는 前提가 정부의 糧穀政策에 은밀히 介在해 있음이 看破하여야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解放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意慾的인 物量 增大政策을 目標하면서도 穀價政策에 관한 限 經濟不安定의 制動裝置로서만 稼動되어 왔음을 해마다 經驗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經濟發展歷史가 교훈해 주듯 穀價를 保障함으로써만이 비로소 農業成長經濟成長은 實現된다.

恒久的인 經濟安定도 生産者價格을 保障하는 次元에서만 그 기틀이 成立한다.

이러한 點에서 최근 數年間 계속 國民團體(農協)가 아닌 非農民團體(商工會議所와 經濟人聯合會)가 정부에 對하여 高米價政策을 擁護하여 온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앞에 말한 두 카테고리 糧政目標은 相互排他的인 것이 아니라 安定基調 위 成長이라는 大目標에서 서로 止揚 綜合되고 있음을 實證的으로 代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農家所得의 低調와 農村經濟의 不況은 國民의 有効需要를 減退시키고 國內市場의 狹少를 招來함에 따라 全體經濟가 비록 低位水準에서 小康(保合) 狀態의 安定을 維持한다 하더라도 海外에 市場擴大를 바라보지 못하는 限 國內 商工業은 連鎖的으로 萎縮되지 않을 수 없었던 這間의 事情을 우리는 商工

人의 逆說的인 高生産者 米價 提案에서 찾아보는 것이다.

## 流通政策의 虛와 實

우리나라 糧穀의 流通構造는 이른바 流通마진에 있어서는 他農產物에 비해 비교적 낮은 趨勢를 보여 주고 있지 마는 莫大한 量의 政府保有穀에 의한 年中價格의 平準化와 糧穀都賣商에 대한 團束一貫政策의 결과 民間의 大型流通機關은 양곡 유통과정에서 점차 退去當하고 政府 및 農協은 反比例하여 더욱 莫重한 流通業務機能에 허덕이게 되었다.

정부는 莫大한 양의 導入糧穀과 保有糧穀에 의하여 平準化政策을 強行하여 왔다. 그리하여 미곡 消費는 1人當 130kg 수준으로 停滯 縮減되었으며(消費助長 効果) 民間保有者(농민 상인)는 양곡보관 보유에 따른 經濟的 損失을 非理的으로 감당하여야 했고 그러는 가운데 양곡 都賣大商은 流通過程에서 脫落하여 갔다. 정부가 收買하는 量 이상으로 生産된 統一米 등이 自由市場에서 價格이 낮게 形成되어 價格機構를 교란하는 現象은 최근 우리가 널리 보아온 바이다. 이 경우 農民에게 또 하나의 負擔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政府는 양곡의 蒐集에서 부터 保管 都小賣에 이르기 까지 잃은 좋은 대신 流通機能의 大部分을 擔當하여야 했고 食糧의 赤字豫算規模는 累積되고 있다. 그것인즉 流通過程에 있어 民間機關(農民 또는 商人)을 쉽사리 除去할 수 있어도 그 機能은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군가 그 機能을 遂行하여야 하는 것이 마케팅의 原理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政府 또는 농협에 의해서 遂行될 때 社會的 總費用의 觀點에서 民間機構에 의한 것보다 더 節約的이며 效率的이나에 대한 疑問은 계속 남게 된다.

요즈음 食管 損額의 累增에 대한 一部豫算計劃者 間에 일고 있는 批判은 이를 단적으로 說明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盲目的인 食管損額만을 없애려는 代案은 자칫 50~60年代의 無軌道했던 糧政에로의 還元만을 재촉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 糧穀政策의 새로운 提言

現在 政策價格으로서의 「高米價」라는 用語는 高生産者米價와 高消費者米價의 二 概念이 混合되어 使用되고 있고 定義가 不分明 하여 使用하는 사람에 따라 그 意味가 다르나 흔히 物價와 關聯시켜 「米價上昇率이 都賣物價 騰貴率을 上廻할 경우」를 指稱하는 것 같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定義는 農產物價格의 特性과 生産者의 經濟의 特性을 考慮할 때 適合한 것이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政府가 主張하는 바에 따르면 高米價政策을 1968년부터 施行하였다고 하나 그 해는 全國의 米穀 收穫로 수확량이 前年對比 14.2%나 減收하였기 때문에 그때의 米穀 收買價格이 前年對比 17% 올랐고 당시 인플레이率 8.1% 보다 약 9% 올랐다 하여 高米價라 할 수 없는 것이다.

以上の 論理的 歸結인즉 첫째. 政府의 政策價格 決定의 基準을 하루 速히 明文化하라는 것이다.

政府가 高米價政策을 標榜하고 있는 以上 高生産者米價의 正體를 최소한 다음 두 가지의 基準에 맞추어 檢討해 볼 지하다.

그 하나는 一般이 認識하고 있는 都賣物價概念을 使用할 경우 예컨대 「都賣物價 上昇率+3~5% 生産獎勵金+凶作加算率(흉년일때)」式으로 認定할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高生産者價格의 上限線을 家計米價로 하고 下限線은 農家所得補償價格을 取하는 方式이 더욱 普遍性이 있다고 보아진다.

둘째, 政府의 收買量 規模를 더욱 擴大하여야 한다. 금년도의 경우 現物收納量까지 포함하여 600餘萬石으로 策定한 모양인데 금년도 統一米의 豫想收獲量만도 近 1,500萬石을 突破할 것인바 政府收買量은 販賣處를 잃은 「통일米」의 一般去來는 過去 2,3年의 經驗이 말해주듯 일반米에 비해 가마당 2,000원 內外의 낮은 價格에서 流通될 것이 明若觀火하다. 거기에 모두가 바라는 대로 今年 米穀수확량 3,300萬石代를 넘어서는 豐年이 들 경우 每年의 例에서 보듯 秋收期(10~12月)에 近 1,100萬石의 米곡이 市場에

쏟아져 나올 경우 價格暴落이 豫想되기 때문이다.

셋째, 非인플레이션 方法에 의한 糧穀基金의 確保 措置를 斷行해야 한다. 당장 金년도중 PL 480으로 導入한 양곡의 國內販賣代錢부터 양곡 자금으로 轉入시키는 措置가 先行되어야 한다.

우리는 過去 剩餘農產物의 경우와 같이 非農民의 浪費를 되풀이 해서는 아니된다.

넷째, 이와 결들여 政府米의 放出價格을 現實化한 것과 諸取扱經費를 감안하여 季節價格 變動幅을 合理의 水準(예컨대 年平均 20-25%으로 調節할 것이 要請된다. 放出價格에 이와 같이 sliding scale을 適用함으로써 첫째 양곡 자금의 缺損을 줄이고, 둘째 民間流通機關의 米穀 保有動機를 誘發하며, 끝으로 年中 價格平準化에 米穀 消費의 増大를 抑制할 수 있다. 이 機會에 다시 強調하는 것은 米가루값 補助라든지 粉食獎勵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영구적으로 外穀輸入國이 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다섯째 肥料農藥등의 生産投入財價格과 農地稅에 대해 최근의 경우와 같이 一律의 價格을 現實化하거나 또는 一律의 政府補助를 하는 方式을 止揚하는 代身, 一定數量 또는 一定 耕地面積까지는 補助價格率을 適用하고 그 以上の 部分에 대하여만 現實料率을 적용하는 方式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이 一定量 또는 面積에 의한 差等料率方式은 특히 小農에게 技術改良의 契機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一般的으로 經濟의 能率과 公平性을 同時에 마련한다.

여섯째, 政府는 糧穀政策의 確固한 指標와 青寫眞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過去 되풀이하여 食糧自給 몇 個年計劃을 보아온 바이지만 食糧의 自給率은 해가 갈수록 深入될 뿐이다.

우선 第4次 5個年計劃에 食糧增產의 計劃指標를 반드시 明文化할 것 부터 提議한다. 그리하여 食糧 需給의 長短期指標와 自給率目標가 5個年計劃의 一環으로 包含되어야 한다.

農水産部만의 計劃은 恒常 그러왔듯 農水産部計劃으로만 머물렀던 進進을 다시 앞지르기 위하여는 食糧自給이 舉國의 計劃으로 計數化되어야 할 것이다.